



강성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

“안전한 대한민국 위해 최적의 국가재난안전망 구축할 것”

글_최준호 중앙일보 기자 joonho@joongang.co.kr

미래창조과학부 강성주(50) 정보화전략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통 관료이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 브레인이다. 옛 정보통신부 정보화총괄과장을 거쳐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행정관-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으로 ICT(정보통신기술)의 DNA를 쌓았다. 이후 OECD 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을 거쳐 지난해 4월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융합정책관으로 미래부 원년 멤버가 됐고, 올 3월 정보화전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 국장의 ICT와의 인연은 1986년 행시 30회에 합격, 공무원이 된 뒤,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를 받을 때 시작했다. 당시 체신부 차관이었던 오 명 전 부총리가 부처 소개 겸 강연에서 “미래 학자 앨빈 토플러가 말한 정보화 세상의 주역이 돼야 한다”고 한 말에 ‘필(feel)이 꽃혀’ 정보통신 분야에 들어섰다. 강 국장은 공무원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ICT와 인연은 없어 보인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의성 봉양중-대구 능인고-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하지만, 이후 체신청에서 관료 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 시라큐스대학교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정보시스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아 ICT 전문지식을 쌓았다.

강 국장은 정보화전략국장 취임 이후 정보화예산협의회를 출범시킨 것을 가장 뿌듯해 한다. 정보화예산협의회는 미래부와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정보화 관련 예산 심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다. 이를 통해 정보화에 전문성을 가진 미래부의 해당 분야 예산편성을 기재부에 일임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강 국장은 또 사무관 시절인 1994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기초해 정보통신부 출범에 기여한 부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라고 말했다.

Q. 많이 바쁘신 것 같다. 최근 가장 많은 시간과 신경을 쏟는 현안이 뭐가.

A. 지금 당장은 국가재난안전망 사업에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지금까지 11년째 진행되는 이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업무다. 국가재난안전망은 전쟁과 지진 등 국가 재난 또는 비상사태 때 휴대폰을 이용한 상용 이동통신망이 무용지물이 될 경우를 대비해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한 신뢰의 국가통신망이다.

Q.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충격이었다. 특히 재난구조체계를 지켜보면서 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했고 제대로 된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안전망의 롤모델이 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A. 2003년 대구 지하철사고와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는 경찰과 소방, 응급의료 같은 관련기관 간 손발을 맞춰서 일하는 것이 인명구조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 국가재난망 사업이다. 미국의 경우 9.11사태 이후 소방·경찰 같은 재난기관 간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아 이미 2년 전

부터 새로운 국가재난망 구축사업에 착수했다. 좋은 사례라고 생각된다.

미래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차세대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을 위한 정보제안서를 모집하고 있다. 차세대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선정에 필요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방식 정보제안서가 접수되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최적의 기술방식을 선정할 예정이다.

Q. 정보보호는 정보화전략국의 대표적 이슈 중 하나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통신사·카드사는 물론 언론사까지 해킹의 피해를 볼 정도로 정보보호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IT강국이란 자랑과 정보보호 취약국이란 오명은 같이 갈 수 없는 일인데…

A. 정보화 강국이지만 정보보호 수준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카드사와 통신사 등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발생할 텐데 금융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법 제도 정비와 기술대책, 관행문화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와 유사한 '정보보호 준비 평가제도'를 민간 자율로 도입하도록 지원역할을 하고 있다.

Q. 미래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A.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는 기존의 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기획이다. 우리 경제는 제조업이 강한 점이 특징인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국가들로부터 추격을 받고 있어 고도화가 절실하다.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을 효율화하는 '인더스트리(Industry)4.0 사업'은 비타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분야의 스마트농업이나 의료분야, 교육분야, 문화관광 등 주요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Q. '정부 3.0'은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주요정책 중 하나다. 그 의미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지는 공공정보 개방 운동'으로 풀이했던데, 쉽지 않아 보인다.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한 군데로 모으고,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생산도, 분석도 쉽지 않아 보인다.

A. 빅데이터산업은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정부도 나름대로 시장창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신과 교통 빅데이터를 이용해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을 짰고, 전염병 같은 국민건강 예보, 어느 지역이 장사가 잘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권분석서비스, 중국인 관광행태 분석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또 빅데이터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매년 미국서 열리는 소프트웨어 개발능력대회인 해커톤을 롤모델로 해서 빅데이터 아이디어를 찾는 경진대회인 '데이터톤'과 같은 행사도 진행해오고 있다.

Q. 공공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A. '정부 3.0'을 통해 보다 많은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좋은 데이터가 없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 또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을 갖춘 우수 인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데이터 공개에 반해 개인정보보호가 주요 화두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기술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법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DB진흥법'이 계류 중인데 조속히 통과되면 좀더 활력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

Q.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중독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거리 풍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눈뿐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 생활습관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A. 인터넷중독에 이어 스마트폰 중독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독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 미래부는 교육부와 협조해서 전국 23개 '청정학교' 시범사업과 예방콘텐츠 배포를 통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중독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전국 15개소에 있는 '상담센터'를 통해 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사나 상담사 양성 같은 사업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부처와도 협업을 통해 중독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SD**